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최병두*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o-Spatial Changes in S. Korea

Byung-Doo Choi*

요약 :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급증했던 초국적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에 관한 주요 세부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성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지구화의 불균등성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국내 경제성장과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증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은 수도권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들은 다문화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단일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하여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화주의 또는 차별배제주의를 내재하면서 이들을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공간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진정한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지구-지방적 시민권의 보장 등을 촉구하는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이 필요하다.

주요어 : 초국적 이주, 다문화공간, 주변화 모형, 지구-지방적 시민권,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

Abstract : This paper is to reconsider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major issues on transnational immigrant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and their impacts on socio-spatial changes in S. Korea. Foreign immigrants who have moved on the contexts of unevenness of globalization and advances in transport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on the global level and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hortage of cheap and unskilled workers have been distributed unevenly, concentrating on the Capital region and local areas with industrial complexes. Foreign workers seems to have some negative influences on regional economies in the long-term, though positive in the short-term. Domestic people seem to have an ambivalent attitude which accepts necessity of multi-culture, while simultaneously continues to be self-confident on ethnic homogeneity.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multicultural policies for foreign immigrants by the mid-2000, but still continues some policies with assimilationism and differential exclusionism, marginalizing them socio-spatially, while lacking local government's policy and programmes. In conclusion,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transfer multicultural societal space of Korea, a geography of transnational migration which promotes especially discourse and policy with authentic multiculturalism, extending roles of local government, and ensuring glocal citizenships.

Key Words : trans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 space, marginalization model, glocal citizenship, geography of transnational migration.

이 논문은 2011.12.16. 2011년 지리학회회의 특별심포지움, '한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의 과제'에서 발표된 원고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1. 서론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초국적 이주자들의 대규모 이동은 이들이 정착·생활하고 있는 개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나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들이 유입된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었고, 지역의 가정들(대체로 저소득층 가정)은 결혼(여성)이주자들과의 혼인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들도 이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고 개인적인 가치나 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들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도 점점 더 활발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은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 정치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나아가 한국 사회공간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초국적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는 물론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보다 포괄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 즉 지구화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 서구 경제의 침체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나 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 과정은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규모에서 동시에 또는 상호 관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지방화' 과정이라고 불리며, 특히 각 규모들이 중첩되고 상호 침투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모적 접근'이 강조되기도 한다. 요컨대 이러한 변화는 흔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으로 이해되지만, 이들의 초국적 이주과정과 지역사회 정착생활은 그 자체적으로 공간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공간'의 형성(또는 생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Choi, *et al.*, 2011).

초국적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사회공간적 변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더불어 학문적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초국적 이주와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는 지난 10여 년 간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학문분야별로 분산되어 학제적, 통합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별 학문분야 내에서도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할 지라도 질적 수준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¹⁾ 앞으로도 초국적 이주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고, 또한 이들이 지역사회나 한국 사회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 정도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은 계속될 것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단계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초국적 이주와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지난 20년 동안 급속하게 전개되었던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에 관한 주요 세부주제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성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초국적 이주자들의 유입 현황과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살펴본 후,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초국적 이주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외국인 이주자(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의 변화 및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게 됨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초국적 이주와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의 특성과 대안적 방안을 고찰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개념들의 변화 및 이에 관한 대안적 접근을 위한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을 간략히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경험적 분석

‘초국적 이주’란 단순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거주지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는 개념 또는 현실적 전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국적 이주라는 행동은 행위자의 의지나 의도를 반영하며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조건지우고 가능하게(또는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들, 예로 국가 간 경제·정치적 관계, 국가 간 물리적 이동성, 유입국의 국경 통과, 유입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규율 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국적 이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착하게 된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송출/유입국 간 국제적 관계, 그리고 세계의 경제정치질서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패턴, 사고, 행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Kim, M.-K., 2010). 나아가 초국적 이주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동만이 아니라, 국경 자체가 다른 모습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초국적 이주가 근대 국민국가의 동질성 가정, 즉 “동일한 국적, 단일한 국민 정체성, 배타적인 시민권, 영토 내부에 대한 포괄적인 통치권”에 충격을 주고, 이를 전환시킴으로써 전통적 국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는 ‘탈 전통적’ 현상이라고 서술한다(Kim, S.-J., 2010, 114).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Vertovec(2007, 150)은 초국적 이주 자체의 문제에서 그 전환적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에서 ‘전환’(transformation)으로 연구의 관심을 옮겨 갈 것을 제안한다. 그는 오늘날 이주자 집단들의 초국적 과정은 근본적인 전환 양식을 포함하며, 이는 3가지 기본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전환은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이주자 지향의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인식적 전환, 정치적 영역에서 ‘정체성-경제-질서’라는 3요소의 의미의 개념적 전환, 경제적

영역에서 노동시장, 금융,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전환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로 하여금 상이한 장소감이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행동을 통해 자신과 더불어 상대방을 변화시키며 또한 지역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흔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좀 더 세분하여 초국적 이주란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배경으로 촉진되는 생산요소들(상품, 자본, 정보 등) 가운데 하나로서 노동력의 국제적 상품화 과정이며, 단지 국경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성을 뛰어 넘는(즉 초월하는) 과정이며, 또한 고국 또는 고향에서 체득되었던 생활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이주함으로써 이질적 문화들이 혼종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외국인 이주자가 얼마나 유입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에 관한 분석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자의 급증과 이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이들이 한국의 사회공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분석에 바탕을 두고, 이 글은 다음 절들에서 지구-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 초국적 이주의 촉진 과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화, 지역사회에 유입·정착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 및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존 주민들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 정부(중앙 및 지방)의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들의 수행 과정을 통한 국가의 정치적 역할 변화,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현실세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문화 사회공간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학문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초국적 이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수는 1990년 49,507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491,324명으로 10년 사이 10배 정도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05년 747,467명, 2010년에는 1,110,961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주

Table 1. Foreign immigrants by type in S. Korea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 구성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민등록인구		48,991,779	49,092,419	49,355,153	49,593,665	49,773,145	
이 민 자	합계 (구성비)	6544,741 (1.3%)	782,882 (1.6%)	951,151 (1.9%)	1,102,230 (2.2%)	1,110,961 (2.2%)	
	국적 미취 득자	소계	615,216	728,831	885,640	1,028,505	1,014,500
		외국인노동자	255,314	259,805	437,727	575,657	558,538
		결혼이민자	65,243	87,964	102,713	125,673	125,087
		유학생	-	-	56,279	77,322	80,646
		재외동포	-	-	-	43,703	50,251
		기타 외국인	190,824	276,608	171,104	103,115	106,365
		단기사증소지불법체류자	103,835	104,454	117,817	103,035	93,613
	국적 취득 자	소계	39,525	54,051	65,511	73,725	96,461
		혼인귀화자	-	38,991	41,672	41,417	56,584
기타 국적취득자		-	15,060	23,839	32,308	39,584	
외국계 주민의 미성년 자녀		25,246	44,258	58,007	92,690	105,502	

Source: Seoul, D.-H. (2010).

민등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10%에서 2010년에는 2.29%로 증가하였다(Table 1).²⁾ 2010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101만 명이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558,538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가 125,087명, 단기 사증소지 미등록(불법)체류자 93,613명, 유학생 80,646명, 재외동포 50,251명, 기타 106,365명 순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은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으며, 국민들도 다문화사회의 전환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다소 주춤하였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와 국내 경제의 불안정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가 또는 장기화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유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두 급증한 것이지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이주노동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결혼이주자는 다소 정체된 상태(혼인귀화자를 감안하면 증가한 것임)이고, 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수가 적은 것은 중국조선족 등 국내에서 취업 중인 재외동포를 외국인노동자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국적 취득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이 증가하여 약 10만명 정도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혼인귀화자 56,584명으로 60.4%를 차지하지만,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39,877명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미성년 자녀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05,502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은 물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해 있다. 즉 2010년 현재 외국인 이주자들 가운데 29.5%는 서울에, 29.6%는 경기도에, 그리고 5.6%는 인천에 거주하여, 수도권 거주 외국인 이주자의 비율이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Table 2). 특히 외국인 이주자가 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3.29%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도 2.95%, 인천 2.35%를 나타내었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 of foreign immigrants in S. Korea.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별 분포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민등록인구(천)(A)	49773	10208	3543	2490	2711	1434	1484	1115	11460	1512	1527	2038	1855	1913	2670	3250	563	
외국인 (천)	2006	536.6	149.0	22.4	15.1	34.0	6.7	8.2	8.7	169.1	9.0	13.9	20.6	12.3	12.0	24.6	28.6	1.1
	2010 (B)	1,139.3	336.2	41.4	26.0	63.6	16.6	19.7	19.4	337.8	19.0	30.1	48.9	28.5	31.3	46.7	66.8	7.3
증가율(06-10)	112.4	125.6	84.8	72.2	87.1	147.8	140.2	123.0	99.8	111.1	116.5	137.4	131.7	160.8	89.8	133.6	563.6	
전국 분포율(2010)	100.0	29.5	3.6	2.3	5.6	1.5	1.7	1.7	29.6	1.7	2.6	4.3	2.5	2.7	4.1	5.9	0.6	
구성비 (B/A)	2.29	3.29	1.17	1.04	2.35	1.16	1.33	1.74	2.95	1.26	1.97	2.40	1.54	1.64	1.75	2.06	1.30	
최다시군구	-	영등포	사하	달서	남동	광산	유성	울주	안산	춘천	청주	천안	전주	영암	경산	김해	제주	
주민등록인구(천)(C)	-	406	360	598	463	343	267	195	705	265	643	541	635	60	236	492	410	
외국인	2006	-	14390	3060	5641	9709	2961	2238	2489	20559	1492	3338	6864	2206	1145	4421	6350	1117
	2010 (D)	-	44281	5075	8432	14070	6968	5363	5895	43190	3718	7467	13196	6808	5296	7182	14653	5198
증가율(06-10)	-	207.7	65.8	49.5	44.9	135.3	148.6	136.8	110.0	149.2	123.7	92.2	2.09	362.5	62.5	130.8	365.4	
구성비(D/C)	-	10.91	1.41	1.41	3.04	2.03	2.01	3.02	6.13	1.40	1.16	2.44	1.07	8.83	3.04	2.98	1.27	

Source: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다. 다른 한편 2006년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563.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남, 광주, 대전 등의 순으로, 지역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이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별 분포를 기초지자체 단위(즉 시군구)로 보면, 2010년 전국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해당지역 인구 대비 5% 이상인 지역은 15곳, 외국인수가 1만명이 넘는 지역은 34개 곳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로 외국인수 44,281명(전체 지역인구의 10.9%)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안산시 43190명(6.1%), 서울 구로구 33700(8.0%), 경기 수원시 31552(2.9%), 경기 화성시 26294(5.3%)이다. 영등포구, 안산시, 구로구 등은 모두 공단이 집중해 있는 지역이며, 수원의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곳에 경기도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인 지역도 여러 곳 있으며,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전남 영암군과 같이 그 비율이 2010년 8.83%를 차지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지역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하는 이유를 고찰하는 것이 지리학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별 분포가 상이하다는 점은 지역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국내 이주 유형별, 국적별로 주거지 분화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³⁾. 예로,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가장 많고, 지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중국 국적(외국인 동포 포함)의 이주자가 전체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영등포구(17.2%), 구로구(13.7%) 등 상위 5개 구에 52.3%가 분포되어 있다(Table 3).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전체 지역 인구 대비 외국인 이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영등포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 35,438명 가운데 93.4%(33,102명)이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되며, 구로구, 금천구의 경우도 유사하여 지역 전체 이주자들 가운데 중국 국적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4.6%,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5개 밀집지역의 구성비로 보면, 미국 및 일본 국적 외국인들도 각각 50% 이상을 나타내어 특정 소수 지역에 상대적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만 국적의 외국인(대체로 거주 기간이 오래된 화교들을 중심으로 함)은 서대문구에 26.3%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3. Distribution of registered foreigner in upper 5 Gu-areas in Seoul(Dec. 2008).
서울시 등록외국인 국적별 상위 5개 구별 분포(2008년 12월)

전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골	일본	미국							
전국계 854,007	전국계 484,674	전국계 79,848	전국계 39,372	전국계 21,789	전국계 21,201	전국계 18,251	전국계 28,853							
서울계 (%) (29.9)	서울계 (%) (39.7)	서울계 (%) (5.8)	서울계 (%) (9.6)	서울계 (%) (40.5)	서울계 (%) (17.7)	서울계 (%) (37.5)	서울계 (%) (44.4)							
구성비 100.0	-	75.5	-	1.8	-	1.5	-	3.5	-	1.5	-	2.7	-	5.0
영등포 35,438	영등포 33,102	성동구 382	용산구 573	서대문 2,323	중구 439	용산구 1,574	강남구 2,046							
구로구 27,901	구로구 26,383	금천구 354	성동구 295	마포구 1,442	성북구 380	강남구 683	용산구 1,771							
금천구 17,924	금천구 16,306	영등포 305	성부구 274	중구 647	동대문 345	서대문 475	서초구 1,439							
관악구 17,317	관악구 15,171	성북구 295	동대문 243	은평구 494	성동구 315	마포구 402	서대문 825							
용산구 12,819	광진구 9,854	관악구 283	금천구 234	영등포 448	중랑구 263	동대문 324	송파구 722							
5개구 (%) (43.7)	5개구 소계 (52.3)	5개구 소계 (34.8)	5개구 소계 (42.9)	5개구 소계 (60.7)	5개구 소계 (46.5)	5개구 소계 (50.6)	5개구 소계 (53.1)							

Source: Korean Immigration Service, 2009, Statistics for registered foreigner by region.

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은 아직 수적으로 적으며, 기초지자체별로 크게 분화된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보다 세분된 지역으로 조사해 볼 경우 이들도 특정 지역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세분된 지역의 실태에 관한 한 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The Korea Economic Daily, 2011.4.11), 서울 지역에는 20여 곳에 외국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타운이 가장 많은 데, 대림동, 가리봉동, 봉천동, 자양동, 독산동, 신길동 등 서울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 지역들은 인근 공단과 거리가 가깝고, 다가구주택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조선족 동포들과 중국인 등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몰려들면서 타운이 형성되었다. 그 외에도 서울에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나이지리아, 인도, 중앙아시아, 이슬람거리 등 다양한 외국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예로, 광희동에 있는 10층 건물인 뉴금호타워는 몽골타워로 명명될 정도인데, 이 건물의 각 층의 상점 대부분은 몽골인을 상대로 영업하며, 주말이면 몽골인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는 이슬람교의 휴일인 금요일에는 1000여명이

모여 무슬림식 예배를 보기도 한다. 이촌동에는 1000여명의 일본인들이 사는 일본인 타운이 있으며, 이곳 버스 정류장에는 오후 2-3시만 되면 개포동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통학 자녀들을 마중 나온 일본인 중년 여성들로 붐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의 거주가 특정 지역들에 밀집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의 차이에 따라 주거지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지역들은 대체로 특정 국적의 외국인 이주자들로 특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주민들과는 분리된 폐쇄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외국인 주거지역으로 잘 알려진 서래마을에는 2000여명의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지구 일대 거리와 레스토랑을 메운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다. 그러나 실제 서래마을처럼 한국인이 활발하게 드나드는 외국인 타운은 서울 이촌동의 일본인 타운이나 이태원 정도이고,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외국인 타운은 상당히 폐쇄적인 외국인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특정 인종(국적)의 이주자들이 폐쇄적으로 밀집하게 되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는 유리한 입지 조건들(예로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저렴한 주거비용 등)과 이에 따라 우선 이주한 주민들이 고

국의 친지들과 가지는 네트워크에 따른 정보의 소통으로 동일 국적의 이주자들이 추가로 이주·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화가 심화될 경우, 이 지역들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게토(또는 슬럼)처럼 도시 내에서도 특정 국적의 저소득층 외국인들로 구성된 지역으로 주변화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3. 지구-지방화, 초국적 이주, 지역경제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로 초국적 이주가 급증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부각된 지구-지방화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구화라는 용어는 흔히 국경을 초월한 생산, 교역, 투자 등과 이를 작동시키는 행위자로서 초국적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의해 점점 통합되고 있는 지구경제의 발전 과정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지구화 과정은 사회공간적 조건으로서 시공간적 압축을 통한 재화, 자본, 정보기술 그리고 노동의 세계적 순환 또는 공간적 이동을 전제로 한다. 지구화 과정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이 과정이 국가의 역할을 쇠퇴시킬 것으로 가정되었고, 한편으로 국제적 회의와 협약들과 이들을 집행하는 초국적 제도들(예로 유엔뿐만 아니라 IMF, 세계은행 등)의 역할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 내 개별 도시나 지역이 지역 경제 계획과 이를 위한 역외 자본 유치 등을 위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음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지구화 과정에서 행위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보다는 지구화 과정이 개별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즉 지구적 과정이 지방적 과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창출하며, 지방화 과정을 통해 지구적 과정이 형성·재형성된다는 점에서 지구-지방화(glocaliz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Swynge-douw, 1996).

이러한 지구(지방)화 과정은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시장의 통합을 통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를 경제 번영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과정에 편승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구지방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무역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실제 과정은 미국과 같이 세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국제적 지배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신제국주의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Kim, M.-K., 2010; Han, 2011). 이러한 상반된 개념화 속에서 지구화라는 용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정계와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제 지구화라는 용어는 다소 진부한 개념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지방화라는 용어는 규범적으로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설명되어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지방화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는 세계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나 지역들(그리고 이들의 고유한 문화)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또는 '혼종'(hybriding))함을 의미하거나 또는 역으로 전 세계 문화가 동질화 또는 표준화(특히 미국화)되는 과정(신제국주의적 과정)으로만 이해될 수 없고, 실제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 역시 지구-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에 반영된 구조적 함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적 생활 여건이 보다 좋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자(즉 생산요소로서 저렴한 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가 새롭게 발전하고 지역-국가들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은 어리석은 일이다. 반면 지구-지방화 과정을 통한 자본주의의 경제정치적 재구조화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관리·통제체제를 창출하고 초국적 노동력의 이주를 통해 계급적 위계화를 재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국적 이주를 막자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의 유동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이동은 인종화, 계급화, 젠더화의 문제를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제3세계 여성들은 단순 이주노동자 또는 결혼이주자의 유형으로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가족의 재생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서비스 영역에 직접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각종 저임금서비스업의 상품화·시장화를 촉진하고 심지어 성적 억압과 착취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종, 계급, 젠더의 관점에서 중층적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초국적 이주의 여성화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지구-지방화 과정에 반대하거나 초국적 이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지방화 과정과 초국적 이주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초국적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게 된 것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정치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에서 이들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공간 구조의 변화가 서로 조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Choi, *et al.*, 2011, ch.4), 초국적 이주는 첫째 시장의 논리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체제의 확산을 배경으로 한다. 즉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지구적 확대를 위한 전제로서 상품화, 특히 자연과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직접 통합되면서, 노동력의 초국적 이주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둘째, 노동력의 초국적 이주는 기본적으로 지구적 규모의 세계분업구조의 재편과 국가 간 불균등발전을 배경으로 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의 지리적 불균등은 산업구조의 국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부의 집중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한편, 여타 국가나 지역의 부의 유출과 소득 감소를 초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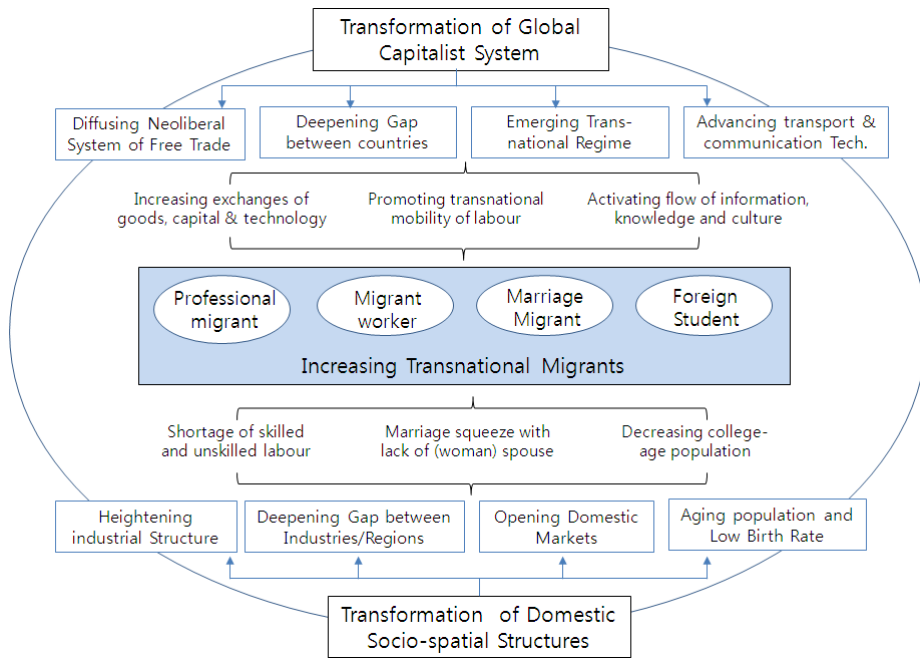


Figure 1. A scheme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migration, 지구화와 초국적 이주 도해

다. 이러한 지리적 분균등 발전은 단순히 부의 유출/유입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노동력의 유출/유입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저발전 국가로부터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셋째, 초국적 이주는 국민국가의 역할 변화와 초국적 레짐의 등장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즉 과거 폐쇄적 경계를 전제로 국민국가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강조하던 국가의 역할은 경제정치적 초국가적 레짐(초국적 기업들과 유엔, IMF, World Bank 등으로 구성된)의 등장으로 인해 기능을 변화 또는 정확히 말해 지구적, 지역적 규모로 기능을 재규모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경이 다공화되면서 상품이나 자본뿐만 아니라 초국적 이주자들의 유입/유출이 보다 자유롭게 되었다. 넷째, 초국적 이주는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의한 시공간적 압축을 전제로 한다. 즉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실제 초국적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정보 전달의 초공간화로 분산된 가족들 간을 국제적 소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연쇄 이주를 촉진한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에 따라 상품·자본·기술의 이동성 증대, 노동력의 초국적 이동성 촉진, 정보·지식·문화의 국제적 교류 증대 등이 촉진되었고, 이에

따라 초국적 이주가 급증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내적 상황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 증대는 국내 경제정치체제와 이에 따른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관련된다. 사실 199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79,8조 원(2525억 달러)이었고,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은 5,886달러였다(Figure 2). 그 이후 국내 경제의 외형적 확대로 IMF 위기 직전 1996년 국내총생산은 52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1380달러로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성장은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IMF 위기로 인해 경제침체와 더불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도 감소했지만, IMF 위기가 상당 정도 극복된 후 2002년부터 다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10년 사이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이주 증대는 한국 경제의 외형적 성장 추이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정치체제 및 이에 따른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관련된다. 첫째, 국내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은 한국 경제의 세계 의존성 증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우선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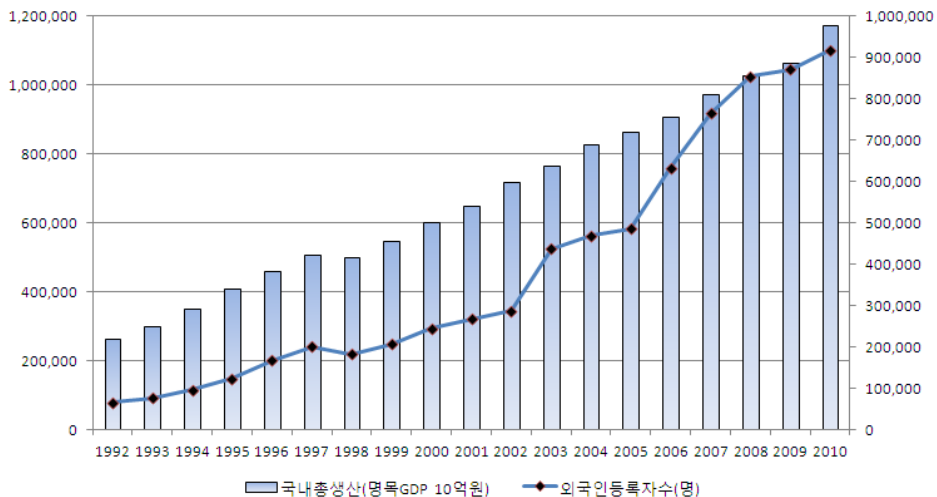


Figure 2. Trends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in S. Korea.
국내 경제성장 추이와 외국인 이주자 유입수의 증가 추이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수출입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대외의존적 경제로 발전해 왔지만, 특히 1990년대 이후 표준화된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와 이에 의해 생산된 상품 수출입 전략의 한계로 국내 시장의 확충, 해외직접 투자의 확대, 그리고 첨단기술산업(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은 세계 경제와의 상호의존성을 확대시키면서 해외로부터 자원이나 자본뿐만 아니라 탈숙련 노동력을 가진 단순 이주노동자들과 정보기술을 보유한 전문직 이주자들의 유입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 초국적 이주는 국내 경제적(즉 산업 및 소득) 불균등과 지역적 불균등의 심화에 따라 촉진되었다. 즉 국내 경제와 1인당 국민소득은 전반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산업 및 소득의 불균등(양극화)의 심화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종(즉 이른바 3D업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촌으로부터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 받았던 도시의 산업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셋째, 초국적 이주는 정부의 국내 시장 개방 등과 같은 국가 정책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즉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됨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 비공식적으로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여전히 순환근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에 대해 때로 대규모 단속을 전개하지만 여전히 10만 명 정도의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하고 있다). 넷째, 초국적 이주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전반적 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의 결혼 배우자 부족과 이에 따른 국제결혼 나아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정치체제의 변화와 국내 사회공간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대규모로 유입된 초국적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들의 유입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

이 어느 정도 충족됨으로써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지역 및 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비록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예로, 외국인 이주자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들이 지역경제의 주요 영역이나 세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즉 지역경제의 주요 영역을 지역생산성, 지역산업구조, 지역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제조업부문으로 유입된 단순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 영역별, 세부내용별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생산성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임금 절감에 따른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을 확대하거나 해외 수출을 증대시키고, 또한 (최소한 단기적으로) 지역생산성을 증대시켜서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추가 투자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효과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며, 이들의 낮은 임금과 그나마 해외 송금으로 인해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내수시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⁴⁾ 둘째, 지역산업 구조의 영역에서 보면,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노후 기업들(특히 노동집약적 업종들)에게는 생산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지만,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차단시켜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연시키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을 억제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큰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해외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셋째, 지역노동시장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노동

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보완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내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여 오히려 실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서 노동조건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외국인 이주자(특히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대는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과정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지역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단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단기적으로 충족시킬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생산성 저하, 산업 재구조화의 지연, 노동시장의 악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간에, 일단 지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인권과 여러 사회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외국인 이주자의 정착과 지역 사회공간의 변화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을 배경으로 국가 간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삶의 조건(소득, 교육, 여타 생활환경 등)이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고국을 떠나 국경을 가로질러 새로운 국가와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면서,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양식과 문화, 정체성 등을 재구성하게 된다. 물론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변화과정은 일방적이라기보다 상호작용적이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을 받아들인 지역사회의 원주민들은 자신들

의 생활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양식, 정체성 등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은 상호 협력이나 조화보다는 포용/배제 또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내포하고, 이에 따라 상호 긴장과 갈등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과 원주민들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인종이나 문화의 혼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문화화’, ‘혼종화’ 또는 ‘다문화주의’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 혼종성 등의 용어 역시 그 자체로 어떤 인종적, 문화적 혼합과 이에 따른 공생의 실현을 윤리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 인종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에 따라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는 경험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정과 이에 따른 이들의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들이 지역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역사회에 유입·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정한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 추구하게 된다. 예로 이주노동자는 작업장에서의 노동, 결혼이주자는 가정에서의 각종 활동,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생활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들은 이러한 목적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는 다양한 생활공간에서의 활동(이른바 ‘존재기본기능’)도 수행한다. 예로 주거활동은 가장 기본적인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가족생활과 마찬가지로 기본생활(공간)에 속하며, 그 외 구매행동, 여가생활, 이웃사회 활동, 역내 친지관계, 공공행정이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예로 자녀 교육, 병원 등), 그 외 지역 내 지원단체들(종교단체 포함)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고국의 가족이나 친지와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한다(Figure 3). 물론 이들은 이주를 결심하는 과정에서부터 고국의 경제정치적 조건들이나 다른 이주가능 국가들의 조건들을 고려하며, 또한 유입국에서 부여되는 경제(고용)규제나 정치(법적)규제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제도들과 규범들로

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주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의 활동(공간)에서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재구성)하는 활동은 흔히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사회공간적 태도(만족도) 및 생활방식은 특이한 유형을 보이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사회 정착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특이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Choi, *et al.*, 2011, ch.8). 첫째,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신이 이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장, 가정 또는 학교 등의 기본생활 공간에 출현하지만, 이러한 공간은 규율을 전제로 한 억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아내고 가식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경우(예로 생필품 구매, 병원 치료나 자녀 교육, 종교 활동 등)를 제외하고는 기본생활공간을 가능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간 및 금전적으로 다른 공간을 이용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다른 공간에 참여하게 될 경우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며, 또한 기본생활공간을 벗어난 다른 공간들에 대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인접한 이웃주민들보다는 멀리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빈번하게 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역사회를 떠나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착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넷째, 그러나 지역사회 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점차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은 흔히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전제로 점차 사회적 집단화될 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화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러한 사회공간적 행태의 특이성은 물론 한편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국적(인종)이나 특성(단순이주자/전문직 이주자, 연령 등)에 따라 다소 다를 것이며, 또한 기존 주민들이 보여주는 포용/배제의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정치적 규제 정도,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은 소수이고 새로운 지역사회로의 이주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들의 행태가 사회공간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행동이 수동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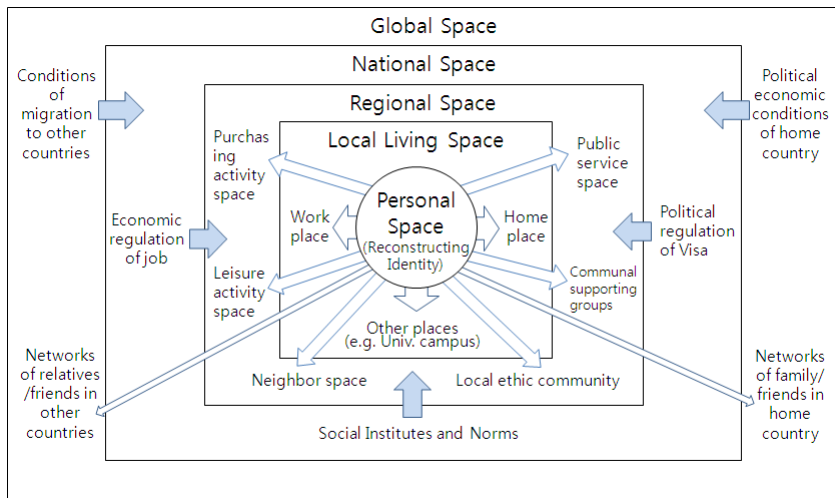


Figure 3. Multi-scalar contexts of life-space of foreign immigrants and reconstitution of their identity.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과 정체성 구성의 다규모적 배경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당연시되는 의심의 유보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적 공간 경험양식에 있어 혼돈에 빠지기도 한다. 즉 그들은 가까움과 먼, 친숙함과 낯섬, 지역성과 지구성,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안과 밖의 이분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한 지역에 물리적으로 인접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기존 주민들과는 달리 이들은 자신이 생활공간에 다규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외부 힘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choi, J.-R.,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새로 정착하게 된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부여되는 힘들이 억압적이거나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며, 심지어 미등록(불법)이주자들처럼 주어진 법적 조건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제약이나 조건들과 그 속에서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제한적이지만 적극적인) 행태는 이들의 정체성의 재구성에도 반영된다. 정체성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자신과 타자들로 구성된 사회공간적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Choi, 2008). 이러한 정체성은 한편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인종성(또는 혈연성)에 근거를 둔다고 할지라도 인종이나 민족의 의미도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다른 한편 정체성은 생활 과정을 조건지우는 사회제도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 흔히 전통적 사회의 해체로 공동체적 장소에 바탕을 둔 정체성이 해체되거나 매우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록 불안정할지라도) 변화했으며, 특히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정체성은 전통적 장소나 공동체 사회에서 단순히 한 개인이 얻게 되는 경험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개방된 사회공간에서 타자와의 부단한 관계 속에서 경쟁적 갈등적 투쟁을 통해 구성·재구성된다”(Choi *et al.*, 2011, 252).

초국적 이주자들은 자본주의적 지구화 과정에서 국경을 가로질러 이주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상품이나 자본의 이동과는 달리 인격체이며 특히 과거 자신의 삶을 통해 구축된 정체성을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체현은 태어나 자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지만, 초국적으로 이주하여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할 이주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들은 기존에 체득된 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원주민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과 혼합된 이중적 또는 혼종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이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단순히 ‘혼합적’이라기보다는 다규모적이다(Jung, 2008). 즉 외국인 이주자들(특히 결혼이주자들은) 자신이 정착하게 된 가정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해서든 뿌리를 내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즉 주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자들은)은 아직 이주 국가에 대해서는 애착이나 헌신성 등의 국가적 정체성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오히려 (특히 귀국을 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모국과 물질적, 정신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출신국 및 이주국 양국 모두에도 소속감을 가지지 못한 초(또는 탈)국가적 정체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자들은 규모(또는 공간적 층위)별로 구축된 재구성된 ‘지구-지방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체성의 이러한 변화와 재규모화는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주민(개인이나 집단)들에게도 이루어진다. 물론 기존 원주민들의 정체성 변화는 단지 지역사회(또는 생활공간)에 출현한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이주 그리고 이를 추동하는 자본주의의 지구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본 입장, 그외 언론이나 담론을 주도하는 집단들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 원주민들은 이들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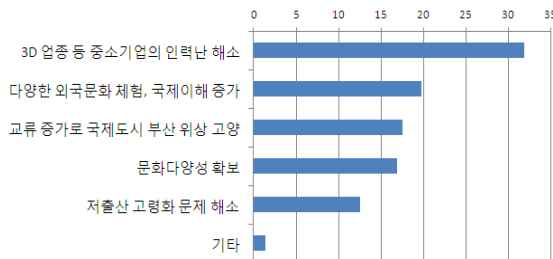
정체성도 점차 다문화적 정체성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주민들은 새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자신의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경제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상호존중하는 공생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실제 의식이나 태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은 한편으로 이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 또는 ‘주민’으로 인정하고 다문화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질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단일민족·단일문화에 관한 의식(이데올로기)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중적 정체성(또는 정체성의 혼란)을 보일 수도 있다.

예로, 부산발전시민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며, 설문응답자 522명 가운데 66.0%가 부산 거주 외국인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을 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이 51.4%, 부정적인 의견이 11.6%로 나타났다(The Busanilbo, 2011.11.15).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3D업종 등 중소기업인력난 해소가 31.9%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 영향은 외국인 범죄율 증가(26.2%)로 가장 높았다(Figure 4). 이러한 조사 결과는 또 다른 조사연구의 결과와 어떤 점에서는 일치한다. 예로 (Yoon and Song, 2011)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며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나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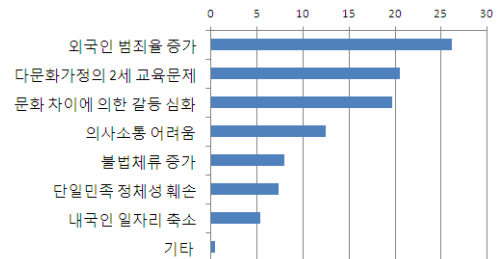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저분하고,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Table 4). 또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가 규범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가 국가(사회)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단일민족 혈통이 자랑스럽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중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이러한 조사 결과 자체는 응답자들의 입장을 분명 반영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기존 주민(또는 시민)들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로, 이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 또는 ‘주민’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은 지저분하고, 범죄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인종·종교·문화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여전히 가진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이나 이중성은 현재 상황이 전환적이고, 이로 인해 원주민으로서 외적 충격에 대해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가 경제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보다 객



(A) Positive influences of increasing foreigners on Busan 외국인 증가가 부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B) Problems expected with increasing foreigners in Busan 외국인 증가로 부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Figure 4. Citizens' perception on impacts of increasing foreign immigrants on urban development,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가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Source: Citizen's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Busan; The Busanilbo, 11.15.2011.

Table 4. Perceptions on influences of foreign workers on national economy and local society.
이주노동자가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항목	찬성	반대	평균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27.4	28.7	3.01
이주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3.6	39.6	2.79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8.9	40.0	2.87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33.3	26.8	3.08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35.2	28.7	3.08

Source: Yoon and Song, 2011, 171.

Table 5. Perceptions on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인식

항목	찬성	반대	평균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55.4	12.2	3.54
우리나라의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50.3	12.3	3.47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 진다.	29.5	24.9	3.07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36.3	19.4	3.20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자랑스럽다.	62.9	10.5	3.77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44.1	16.3	3.36

Source: Yoon and Song, 2011, 170.

관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이 과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지만 국내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이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가, 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저분하고 이들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올라가는가의 문제는 시민들이 막연히 인식하는 것과 실제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공간적 윤리의 모색과 더불어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공간환경적 영향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해 기존 시민들이 가지는 이러한 인식이나 태도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언론의 홍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되며,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요구된다. 즉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을 배경으로 추동되는 초국적 이주는 이주자 개인이나 개별 국가 또는 지역의 차

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본의 지구적 순환 과정에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산업간, 계층간) 및 공간적(국가간, 지역간) 불균형을 전제로 하며 또한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은폐 또는 무시하기 위한 담론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자신이 구체적 경험이나 지식 없이 막연하게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5. 국민국가의 성격 변화와 외국인 이주 정책

초국적 이주의 증대는 기존의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적 정체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외국인 이주 정책의 변화를 초

래하고 있다. 사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이주의 증대는 일정한 영토적 경계에 바탕을 두고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서구의 경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탄생한 이러한 근대 국가의 개념은 사법적 관할권과 정치적 권위의 행사를 국가별로 구분된 영토적 경계에 바탕을 두고 그 공간 내에서 배타적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1789년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한 국가 내의 주권이 군주가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개념은 20세기 후반까지 동질적 문화를 가진 국민들로 이루어진 정치체제의 기본단위로 간주되었다(Lee, 2008, 6). 그러나 실제 이러한 국민국가의 개념에 해당되는 국가는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아시아의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 한정된다.⁵⁾ 특히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단일 혈통, 단일 문화를 유지해온 것으로 믿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배집단은 이를 사회공간적 통합과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단일문화를 유지해 왔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Lim(2010, 12)은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오래된 북방 유목민으로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고조선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다양한 배경과 경로를 통해 받아 드렸음을 서술한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에는 다양한 다문화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체적으로 흡수하여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혼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이미 20세기 이후 근대 문명의 유입과 일제 식민지배의 와중에서 ‘다문화’의 역사적 경험은 일상적 시·공간 속에서 체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화, 식민지,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과정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이주의 증가’와 다양한 문화 융합의 사례 등은 이미 한국 사회의 ‘내부’에서 다문화적 현상이 확산되고 있

었던 징후”라고 할 수 있다(Kim, S.-J., 2010, 114). 이와 같이 한국사회가 그동안 (최소한 개념적으로) 유지해 오던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 이데올로기적 인가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실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고찰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구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은 흔히 3가지 유형(또는 모형), 즉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구분된다(표 6). 만약 한 국가가 단일민족·단일문화의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고수할 경우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기본적으로 차별적 배제 모형을 택할 것이고, 지구적 및 국가적 상황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불가피하게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정책은 동화 모형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화 과정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이러한 모형들의 정책들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따라서 흔히 이른바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답변들을 제시·유도한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일찍 시작되었지만 유사한 경로를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내향적 국제화’, ‘다문화공생’과 같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담론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정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의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주의 모형을 지향하기보다 주변화 모형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변화 모형이란 이주자의 능력 일부(경제적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에의 기여)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사회공간적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 정책으로 해소하려는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의 유

Table 6. Policy models on foreign immigrants.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주변화 모형
정책의 정향성	국가가 원하는 이주자에 대해 영주권 부여, 원하지 않는 이주자는 영주가능성 차단, 차별화하려 함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함	이주자의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고 정체성과 인권을 인정하려 함	이주자의 능력 일부(생산에 기여)를 인정하지만 최소한 지원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 함
정책 목표	외국인 이주자의 배제 또는 최소화	외국인 이주자의 주류 사회 동화	외국인 이주자와 공존을 통한 통합	외국인 이주자 허용, 계층화
국가 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적극적 지원	소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동등한 타자성과 관용	차별적(낮은 계층적) 존재
법적 수단	단속 및 추방	동화의 제도화	제한 권리 인정	분리 방치, 규제
정주화	불가능	가능	가능	비교적 가능
정체성	이질화	동질화	다원화	계층화

Source: Choi and Kim, 2011, 359.

입이 허용되지만 하위계층의 차별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러한 모형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 예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수요나 저소득층 가구들(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적령기 배우자의 부족을 충족시킴으로써, 국가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하지만, 실제 이들은 유입된 국가의 새로운 하위계층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자신은 사회[공간]적으로 소외·주변화되게 된다”(Choi and Kim, 2011, 360). 외국인 이주에 대한 주변화 모형은 한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인식에서도 암묵적으로 함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변화 모형의 채택 여부는 어떠한 사회문화적 지향(즉 단일문화 또는 다문화 지향)을 가지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정치경제적 성향을 가지는가에 더 많이 의존한다.⁶⁾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즉 1990년대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개별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없었다고 할 수 있

다. 2006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외국인 이주자와 이들의 자녀(혼혈인)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Lee, 2008; Kim, 2009). 이 종합대책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 외국인 이주자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에서 이들의 인권보장과 상호이해 및 존중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전제한 것이었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의 선언은 지구화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고, 실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 이주자들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정주의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정주의적 정책조차 현(이명박)정부 하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주도적 정책은 이들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주의적 정책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여전히 차별적 배제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최근 (단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보장 등을 허용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주의 모형보다는 동화모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2006년 이후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정책 방안 역시 결혼이주자 가족들이 어떻게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한국의 지역사회에 적응·통합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이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은 정부가 이들의 유형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이한 정책적 성향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외형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실제 유형별로 차별적인 방안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지자체가 이들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6년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과는 달리(Choi, 2011),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본격화되었고, 지자체는 대체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 역할에 수행하는 정도이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지역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로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거점운영기관을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159개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를 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Park, 2011, 9).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획되고 또한 기획지방자치단체들의 매개 없이 지역에 직접 집행되면서, 정책의 중복과 과잉, 실효성 저하, 추진주체들 간의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들은 지역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실제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 시행하기보다는 지역 간에 별 차이가 없이 한글교실이나 문화축제 등 획일적인 프로그램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특히 군단위 지자체)은 주로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의 모색에는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실제 외국인들의 참여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외국인 이주자에 의하면 “외국인 축제라고는 하지만, 다 똑 같은 내용들뿐이다. 외국인 축제에 몇 번 가 본 친구들은 이제는 재미없다며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⁷⁾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을 위한 축제들이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안산시 원곡동에서 문화예술공동체 ‘리트머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커뮤니티 아트는 지역 예술가들만 아니라 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한편 이주민 지원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함으로써 “소수자의 문화 권리를 확보하고 문화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목적성으로 인해 순수한 다문화적 예술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공간적 맥락 속에서 문화예술의 본질을 유지하며 커뮤니티 아트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기도 한다(Kim and Chung, 2011, 9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

주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표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반영한 구체적 내용들을 개발하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기존의 질서와 제도에 따라 사회(공간)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차별적 배제 또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시행한다면, 실제 이들의 주체적 참여와 자발적 통합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 자민족·자문화우월주의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주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담론을 주도한다면, 여론 형성의 중심에 있는 언론매체들이나 일반시민들 역시 이러한 의식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예로, 국적 취득 문제, 출입국 관리 문제 등)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제 이들이 생활하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의 특성이나 사회공간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의견이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간 외국인 이주 관련 정보 및 정책적 방안들을 교류하여 상호 협력적이지만 중첩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제공을 능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국적으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적에 근거한 권리의 개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의 다문화적 시민권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

다(Kymlicka, 2003; Choe, 2008). 기존의 시민권 개념은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에게 한정되었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시민권은 누가 시민(또는 주민)인가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및 지위의 문제 그리고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에 직면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통합의 문제와 관련된다(Joppke, 2007). 나아가 다문화 사회 공간에서의 시민권은 국가적 개념에서 지구-지방적 시민권의 개념으로 재규모화되고 있다(Choi, 2011, ch.7).

6. 맺음말: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을 위하여

지난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해지고 있다. 오늘날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촉진되고 있는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 증대와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의 확대는 경제의 영역에서부터 정치, 사회·문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지방화 과정과 특히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초국적 이주의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공간)로의 전환은 기존의 학문분과들에서 사용되어온 전통적 개념들과 이론들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이러한 전환 과정은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 이와 관련된 영토, 국경의 개념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개념에 근거를 둔 전통적 ‘한국학’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지방화 과정 및 외국인 이주자의 초국적 이주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정착 과정 자체가 공간적 개념들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지리학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초국적 이주는 공간적 차원을 함의한 지구-지방화 과정, 특히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국가간 불균등발전을 전제로 하며, 또한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이주는 국가를 가로지르는 이동으로서 탈영토화와 새로운 지역의

정착이라는 재영토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지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일반에서도 이러한 공간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유럽국에서도 이주자들의 분포는 지역 간에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흔히 노동시장의 분절과 더불어 거주지의 분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은 지역사회에서의 기존 주민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운 장소성을 반영하며, 또한 기존 주민들도 이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점들을 포괄적으로 함의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보다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는 점이 제안되었고(Choi *et al.*, 2011; Jung, *et al.*, 2011), 실제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구지방화와 초국적 이주·정착 과정은 이러한 다문화공간의 개념화에서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가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요구한다. 즉 이는 분절된 단위 지역들과 이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국가 및 세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구화와 지방화가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즉 '지구-지방화' 과정을 함의한 지리학의 발전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리학 분야에서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선 지리학의 기본 개념인 지역과 장소, 국가(영토 및 국경)와 민족 등의 개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더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세계시민과 지구-지방적 권리의 개념 등이 어떻게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에 도입되어야 하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은 지역과 장소의 개념 변화를 요구한다. 지리학은 흔히 지역연구의 전통 속에서 지역을 자기 완결적 단위공간으로 이해하고, 한 지역의 성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규명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제 지역은 결코 고립·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고 의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에서 나아가 지구적인 것

과 연계됨으로써,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을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가 급속히 발전·확장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지구적 차원들이 공존하면서, 이들 간 상호작용이 증대하고 지역적 규모의 활동이 국가적 매개 없이 지구적 규모와 연계되는 '규모 뛰어넘기', 그리고 국가적 규모의 정부 활동이 지구적 및 지역적 규모로 확장되는 국가 활동의 재규모화 등이 만연하게 되었다(Brenner, 1998; Jung, 2008).

이에 따라 장소의 개념도 변하게 되었다. 장소란 흔히 생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문화가 (재)형성되는 터전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생활공간과 문화가 형성되는 터전으로서 장소가 분리되게 되었다. 한 생활공간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면서, 문화와 장소 간의 일대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물리적으로" 여전히 동일한 지역일지라도, 지구적으로 떠도는 수많은 문화들이 접촉하면서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현상학적으로는' 다른 지역'이 되었다고 주장된다(Choi, 2009, 54). 그러나 이점은 문화의 장소성이 완전히 해체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새로운 생활공간 속에서 기존의 문화를 새로운 지역 문화화 결합된(또는 혼종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원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개방성과 연계성의 증대 및 지구-지방적 규모화에 따른 개념적 변화가 지역이 지구화 과정 속에서 독자성(또는 특이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것으로 규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가 미국이 주도하는 과정 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추동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화 과정에 노출된 지역들이 획일적으로 미국화 또는 신자유주의화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지방화란 단순히 지구화와 지방화의 수직적 또는 병렬적 연계가 아니라 지역의 자립과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관련적 연계로 새로운 공동체들 간 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Hong, 2010).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들 간 관계의 구축은 지구화에 대응하여 과거와 같은 단위 지역의 자립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립성을 가진 지역들 간 연합을 형성하는 것, 즉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은 국가와 영토의 개념 변화를 요구한다. 초국적 이주는 근대 국민국가체제 및 그와 관련된 사회과학 일반에 걸쳐 정당화된 개념이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동일한 국적과 문화, 배타적 국민의식, 영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 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국적은 같은 인종이나 혈통, 같은 언어와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며, 국적을 가지게 된 국민은 다른 국민들과는 구분되는 배타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국가는 국경에 의해 폐쇄된 영토를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고(국가 통화, 외교권의 독립성), 국민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참정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은 이러한 전제들을 와해시키거나 손상을 입히고 있다. 단일민족·단일문화, 애국적 국민(민족)주의, 배타적 영토주의 등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이 잠식 또는 약화되고 있다. 지구-지방화 과정과 이에 따른 초국적 이주자의 유입은 국가중심적 안보 논리, 국가 통치를 위한 폭력 독점, 애국적 국가 정체성의 요구, 민족 발전과 이를 위한 헌신성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단일민족·단일문화에 대한 믿음과 국가중심적 충성 또는 헌신성에 바탕을 둔 가치관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날 지구상의 국가들 가운데 실제 단일민족·단일문화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그렇다고 믿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국제적 교류의 증대, 특히 초국적 이주의 급증은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가 더 이상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배타적 영토성 역시 점차 완화되고 있다. 초국적 이주는 단순히 비인격체적인 상품이나 자본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사람과 이에 체

현된 문화가 국경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품이나 자본의 초국적 이동에 대한 국경 통제에 비해 노동력의 출입국에 대한 통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과 안전 및 복지 제공 등). 따라서 영토주의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구화 과정 속에서 추동되는 경제정치적 통합과정(예로, 유럽 연합, FTA 등)은 영토에 근거를 둔 경제시장의 통제나 통화 및 재정 정책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해체되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국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특정한 유형의 공동체 또는 장소라고 이해한다면, 해체되어야 할 것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이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이에 의해 구축된 물리적 형상이나 특성(예로, 국경에 폐쇄된 배타적 영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의 주장을 꼼꼼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하비에 의하면, 국가에 관한 지리학적 이론을 탐구함에 있어, “만약 우리가 국가를 특정한 종류의 장소 구성이라고 본다면, 장소 이론에 포함된 모든 것 – 공간 및 자연의 생산과 관계가 있는 – 은 국가가 무엇이었으며, 현재 무엇이며, 또한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를 어떤 이념형 또는 불변의 본질로 간주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국가를 장소 구성 과정의 유동적 산물로 보아야 하며, 그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생산과정, 사회적 관계, 기술, 세계에 관한 지적 개념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구조라는 상이한 모멘트들이 유동적 실체를 사회적 권력의 견고한 ‘지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경계화된 세계(영토화된 이상블라주) 내에서 상호 교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Harvey, 2009, 272).

셋째,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은 세계시민주의와 지구-지방적 권리에 관한 개념(또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촉진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전통적 개념(또는 이념이나 가치관)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로 기존의 주민, 시민, 국민의 개념들은 기본

적으로 폐쇄된 지역, 장소, 도시, 또는 영토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는 이러한 절대적 공간 개념에 근거한 정체성이나 가치관(충성심 등)이 더 이상 형성·실현되기 어렵도록 한다. 즉 지구지방화와 초국적 이주에 따른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은 시민성이 지역적 정체성과 지구적 정체성이 변증법적(또는 관련적)으로 결합된 복수적, 혼종적, 다규모적 개념으로 변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념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근대 칸트의 철학, 나아가 고대 스토아학과에 까지 소급될 수 있는 세계시민주의에 함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Nussbaum, 1997).

오늘날 세계시민주의는 물론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다른 주장들과 개념들로 구성되지만(Harvey, 2009), 기본적으로 지역적 및 지구적 정체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정체성은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형성되며, 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집단적 사고나 실천을 고양시킨다. 오늘날 지역이 지구화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형성은 지구적 정체성과 분리되지 않으며, 국가적 정체성과는 배타적이지 않다고 주장된다. 즉 오늘날 지역적 정체성은 지역들 간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구적 시민성은 개별 지역이나 국가 내 시민들이 지역간 또는 국가간 연대를 통해 시민성을 확장할 때만이 그 보편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Park, S.-H., 2009). 즉 새로운 시민성의 지리학은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의 요구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세계시민주의에 근거를 둔 지구-지방적 시민성으로의 전환에 이에 따른 초국적 이주자들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 즉 세계시민적 권리, 또는 지구-지방적 권리의 개념을 가능하게 한다. 칸트는 세계시민주의를 논의하면서, 세계시민적 윤리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 추정되는) 개인들이 명백히 정해진 국경을 넘을 때 환대(hospitality) 받을 권리를 가질 것임을 요청한다. Benhabib(2004, 27)에 의하면, 세계시민적 권리로서 이러한 “환대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사이, 우리 개인에 내재된 인간성의 권리와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 사이의 공간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환대의 권리로 표현되는 세계시민적 권리는 외국인 이주자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지는 보편적 권리와 함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누려야 할 특정한 권리의 다규모적 (즉 지구-지방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은 한편으로 절대적 공간(고정불변의 분명한 경계를 가진 영역으로서 지역이나 국가)의 개념을 벗어나서 시민성 또는 권리의 관련적, 다규모적 개념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

- 1)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에 관한 학제적, 통합적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리학 내에서 이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재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관해 Choi(2011b) 및 Choi and Shin(2011) 참조.
- 2) 이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 것으로, Seol(2010)에서 제시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Attached Table 1).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국적 취득여부 및 외국인 이주자들의 자녀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후자의 자료를 우

Attached Table 1. Trend of resident population and foreigners provided by KOSIS.
통계청에서 제시된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증가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민등록인구	48,782,274	49,092,419	49,355,153	49,593,665	49,773,145
외국인 총계	536,627	722,686	891,341	1,106,884	1,139,283
구성비	1.10	1.47	1.81	2.23	2.29
증가율	-	34.7	23.3	24.2	2.9

- 선 제시하였다.
- 3) 초국적 이주자들의 이러한 사회공간적 주거 분화는 예로 1920년대 호놀룰루 이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Lee, 2007).
 - 4)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외국인 단기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료는 10억8천만 달러로 2009년 6.5억 달러보다 66% 늘어났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료는 대부분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The Korea Economic Daily, 2011, 4, 11).
 - 5)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다인종, 다종교, 다언어 사회, 즉 다문화국가들이다. 예로 중국의 경우, 55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언어, 민족, 종교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다양하다. 다문화국가인 인도의 경우 18개에서 24개까지의 공식 언어가 사용되며, 600개 이상의 지역 언어가 있으며, 소규모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도 네 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다문화국가이다.
 - 6) 이러한 설명과 다소 유사하게, 한국 사회에서 같은 민족인 혼혈인을 타자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순혈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및 ‘위계적 민족성’ 개념으로 설명한다(Seol, D.-H., 2007).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정치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 7) 이 논평은 <http://blog.daum.net/ssok1/1872>에서 발췌한 것임.

참고문헌

- Benhabib, S., 2004,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ner, N., 1998, Global cities, glocal states: global city formation and state territorial restructuring in contemporary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1-37.
- Choe, Hyun, 2008, Postmodern citizenship and vision of transnational political community, *Economy and Society*, 79, 38-61 (in Korean).
- Choi, Byung-Doo and Kim, Yeung-Keung, 2011,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related policies and supporting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4), 357-380 (in Korean).
- Choi, Byung-Doo and Kim, Yeung-Keung, 2011,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related policies and supporting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4), 357-380 (in Korean).
- Choi, Byung-Doo and Shin, Hae-Ran, 2011, Geography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trends and major subject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1), 65-97 (in Korean).
- Choi, Byung-Doo, 2008, A critical reflection on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in urban development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4(5), 604-626 (in Korean).
- Choi, Byung-Doo, 2011a, *Multicultural Co-existence: Transformation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and Roles of Local Community in Japan*, Purungil, (in Korean).
- Choi, Byung-Doo, 2011b, Toward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research 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1(1), 1-33 (in Korean).
- Choi, Byung-Doo, Yim, Seok-Hoi, Ahm, Young-Jin, Park, Bae-Gyoon, *Glocalization and Multicultural Space*, Purungil, (in Korean).
- Choi, Jong-Ryul, 2009, **Multiculturalism in deterritorialized space; problematic situ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ocial Theory*, 35, 47-79 (in Korean).
- Han, Su-Kyung, 2011, **Self-contradictions in the globalization theory**,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8, 121-160 (in Korean).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Geographies of Freedom*,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Hong, Soon-Kwan, 2010, Glocalism and local culture as a suggestion for a joint research, *Journal of Seokdang Academy*, 46, 1-17 (in Korean).
- Joppke, C., 2007,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status, rights, identity, *Citizenship Studies*, 11(1).
- Jung, Byung-Ho and Song, Do-Young, et. al., 2011, *Multicultural Space in Korea*, Hyunamsa (in Korean).
- Jung, Hyun-Joo, 2008, Migration, gender and scale: new trends and issues in the feminist migration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43(6), 894-913 (in Korean).
- Kim, Hee-Soon and Chung, Hee-Sun, 2011, practicing multiculturalism through community arts: the case of art space 'Litmus' in Wongok-dong of Ansan-si,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5(1), 93-106 (in Korean).
- Kim, Mi-Kyung, 2010, **Globalization, glocalization, multiculturalism**: A proposal for globalization form below,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59, 207-252 (in Korean).
- Kim, Mi-Na, 2009, **The phases of progres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a view of the policy**: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and advanced nation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7(4), 193-223 (in Korean).
- Kim, Shin-Jung, 2010, The embodiment of multicultural space and 'migration' - the multicultural aspects in Korean Poetry,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26, 113-143 (in Korean).
- Kymlicka, W., 2004, *Multicultural Citizenship*, Clarendon Press, Oxford.
- Lee, Dong-Soo, 2008, Citizen and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 terms of Mouffe's perspectiv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2(2), 5-23 (in Korean).
- Lee, Hye-Kyung, 2008, The shift in immigration policy towards expansion and inclus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104-137 (in Korean).
- Lee, Young-Min, 2007, Multiculturalism and socio-spatial segregation of Honolulu in the 1920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675-690.
- Lim, Hyung-Baek, 2010,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s' **identity: historic- anthropological interpretation**, *Multiculturalism and Peace*, 4(2), 10-42 (in Korean).
- Nussbaum, M., 1997, Kant and Stoic Cosmopolitanism,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5, 1-25.
- Park, Se-Hoon, 2011, Localiz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an reflection on local immigrant policies in Korea, *Space and Society*, 21(2), 5-34 (in Korean).
- Park, Seon-Heui, 2009, **The implications of global citizenship and regional identity in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ield of geograph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4), 478-493 (in Korean).
- Seol, Dong-Hoon, 2007, Sociology of the 'mixed-blooe': Hierarchical nationhood of the Korean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52, 125-160 (in Korean).
- Seol, Dong-Hoon, 2010,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special fund for immigrant integration, *Journal of Korean Ethnology*, 44, 145-161 (in Korean).
- Swyngedouw, E., 1996, **Neither global nor local: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Cox, K.(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Guilford, New York and London, 137-66.
- Vetrovec, S., 2007, Migrant transnationalism and modes of transformation, in Portes. A., and DeWind J.(eds.),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Berghahn, New York and Oxford, 149-180.
- Yoon, In-Jin and Song, Young-Ho, 2011,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55, 143-192 (in Korean).
- 교신: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팩스: 053-850-4151)
-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15, Naeri-ri, Jinryang-up, Gyung-san-si, Gyung-sangbuk-do, S.Korea, 712-714 (e-mail: bdchoi@daegu.ac.kr. phone: +82-53-850-4155, fax: +82-53-850-4151)
- 최초투고일 2012. 2. 3.
수정일 2012. 2. 22.
최종접수일 2012. 2. 27.